

# 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김인식 의원외 13인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 
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불 임 참 조
4. 검 토 의 견 : 불 임 참 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7월 11일

교육사회위원회  
전문위원 안문환

대전광역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 
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이 조례안은 2007년 7월 9일 김인식 의원의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도면 사전검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
(안 제3조).

나. 편의시설 설치검사, 사전검사 대상, 검사시기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4조 내지 제6조).

- 다. 사전검사요원의 구성, 수당, 직무, 의무 및 제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7조 내지 제10조).
- 라. 관계공무원과 건축물 시설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11조 내지 제12조).
- 마. 사전검사 보고서의 작성, 보고, 결과의 반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13조 내지 제14조).
- 바. 예산의 확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15조).

### 3. 검토의견

본 제정 조례안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이 제정된 후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의무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, 사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필요성이 확대되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,

#### 주요제정 내용은

- 총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제1조는 목적, 제2조는 정의
- 제3조와 제4조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

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 해야 하며, 2곳 이상의 편의시설자문기관의 지정,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,

- 제5조는 사전검사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,
- 제6조는 사전검사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고, 검사요원은 3인 이상으로 하도록 함.
- 제7조와 8조는 검사요원을 15인 이내로 하고, 임기는 2년,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,
- 제9조와 10조는 검사요원은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위해 현장 조사, 검사 및 확인을 하며, 검사결과를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및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,
- 제11조와 제12조는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통보, 연간 계획수립 등의 관계공무원의 의무와 사전검사 시 현장안내 및 사전검사결과 내용의 반영 후 결과보고 등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
- 제13조는 3일 이내 사전검사 결과보고서의 제출과 결과보고서 작성이 어려울 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제14조는 사전검사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·반영토록하고, 필요시 검사요원 및 관계기관·전문가 등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
- 제15조는 편의시설 설치 및 연구와 교육, 홍보, 사전검사를

위한 예산확보와 시행에 관해 규정함.

##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장애인·노인 등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,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및 정보 접근 증진을 위해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되나,

본 조례안의 시행과 사전검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건축허가 민원처리 시의 민원발생이나, 시행규칙 제정 시 민간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대상 건축물의 선정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이나 행정력의 낭비,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